

## 수도권 규제 완화와 사회비용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화두 아래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고질적 규제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혁파하려는 의욕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성원의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책혼선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넘어 실망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경솔한 재검토 논의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대표적 사례이다. 장기적인 국가 공간정책을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비책 없이 중단 또는 완화한다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와 사회비용의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첫째,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를 가속화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지방의 기업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만으로도 지방유치가 이미 결정된 기업까지도 지역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은 지역내부의 역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간 4~5배에 달하는 발전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발전을 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48%, 금융·업무·정보 등 경제-사회부문의 중추관리 기능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런던, 파리 및 동경 대도시권들은 집중도가 우리나라 수도권의 1/2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의 촉진 차원에서 강력한 집중억제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둘째,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추락한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킨다. OECD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쟁력은 전 세계 78개 대도시권 중 68위에 불과하다. 수

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제조업 위주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적 대도시권에 걸 맞는 산업구조와 도시개발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수도권 양적 성장과 제조업 입지 확대만을 추구하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특히 수도권은 토지이용차원의 계획적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난개발의 주범인 공장의 자유입지 비중이 지방의 1.6배인 5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입지를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면 수도권의 난개발 확산은 불가피해진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다양한 측면서 수도권 내 과밀, 혼잡비용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며, 세계 도시지역으로서의 수도권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수도권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수도권의 고비용, 저효율의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초래된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지방경제의 쇠퇴와 공동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지방주민의 생업기반 파괴와 국토의 발전 잠재자원을 사장(死藏)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조업 생산성이 계속 악화되는 수도권에 제조업 투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도권은 과밀혼잡비용의 증대로 제조업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 생산성은 이미 지방 평균의 75% 수준으로 추락한 실정이다. 생산성이 추락하는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일부 기업집단의 이익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시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너무 큰 국가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무모한 시도이다. 일시적 정책오류가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최대 과제인 경제의 잠재성장률마저 약화시키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

\* 충청투데이 5월 9일(금) 게재